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外 1

孫 順 成



■ 편집자 주

손순성씨는 본회 회원으로서 통일 문제에도 관계하는 통일관계 전문가이다 민족의 과제인 통일에 관한 그의 고론을 참고하도록 여기에 특별히 실는다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W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지만 그다지 매끄럽지만은 않은 회담으로 끝을 맺었다.

합의라는 큰 틀 속에서 양국간의 대북 인식 차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고 2001년도 대북정책은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안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우리와 미국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첫째, 대북 포용정책에 있어 우리정부는 전폭적 지지를 원했으나 미국은 큰 틀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둘째, 한미공조 측면에서 우리는 전반적 공조를 미국은 공조를 확인하면서 도 핵, 미사일은 미국,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라는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셋째, 상호주의의 해석은 우리의 신축적 상호주의에 반해 미국은 신축적 상호주의를 기조로 두되 검증을 거친 포괄적 상호주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넷째, 대북 인식의 차이에서 우리는 해소를 기대했으나 미국은 북한정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섯째, 우리정부는 김 위원장 답방시 평화선언에 관해 논의하려 했으나 미국은 그 부분은 4자 회담에서 논의하고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항을 활용해 긴장완화를 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상회담의 우리 정부는 너무 대북공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회담성과를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 N.M.D.체제 등에 관해서도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이번 회담을 통해 표출된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미 국무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 6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한.미.일. 정책공조
2. 한반도의 긴장완화 지지
3. 북한정권의 정확한 인식
- 4 대북 정책 전반 재검토
5. 대북 점검과 투명성 확인
- 6 북한의 무기확산 우려

이상과 같은 미국의 대북 6원칙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만의 일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연결시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여 6개 원칙은 그동안 미 행정부의 안보관계자 특히 파월장관 등이 발언한 내용들을 간추려 놓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미국의 새 행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대북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점을 대외에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 행정부내의 의견차이와 한미의 대북정책에 대한 현격한 이견이 표출된다는 대외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우리의 의지가 어떻든간에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에 대한 지지보다 한국,

일본 등 우방과의 협의를 우선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등의 현안도 남북한 문제와 어느 면에서는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대북정책만은 동맹국과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정부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았으나 미국의 대북 불신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미국도 북한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미국의 확고하다시피까지 한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측에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정부도 이점을 명심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용정책은 미·북 관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아직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선택의 폭이 좁혀지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바랄 수는 있어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이나 경제제재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한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 중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도 양국간의 시각차를 분명히 들어냈고 남북간 평화선언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해로 간주돼 왔던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N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만은 다행이라 하겠다. 부시 행정부는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주한 미군 문제와 남북한 평화선언에 관한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일 요건으로 보고 있는 현 상황으로는 북한이 미국의 바라는 바대로 모든 부문에서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한반도 문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면에서도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변화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평화협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완화는 우리민족 내부의 입장에서 남북한 평화선언을 통해 주도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시각차가 잘못 이해되면 한미관계의 악화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그냥 넘길 일만은 아닌 것이다.

한국은 다소 진보적이고 부시 행정부는 반대로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가 아직 정책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재검토가 끝나면 북한도 확실한 대미정책을 확립할 것이고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조건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냐에 관전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게 군사적 조건을 전제로 한 정책을 고수할 경우 긴장은 지속되리라 보여진다. 미·북 관계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한번 시작되면 진전 속도는 빠르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장관급 회담도 아무 해명도 없이 연기하고 최근 들어 강도높게 미국에 대한 비난 방송을 재개하는 등 태도가 경색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북 관계보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남과 북이 인내심을 갖고 민족의 미래를 후손들에게 형태로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겠다.

남북 정상회담 1년간의 결산

우리는 흔히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공(功)과 과(過)중에서 공(功)보다는 과(過)를 얘기하며 후회와 질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설계한다. 그러나 나는 이번 투고에서 공(功)과 과(過)를 선별치 않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은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갈려 지내온 지난 50년 동안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질곡과 냉전이라는 이념의 틀 속에서 언젠가는 통일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절망감 속에서 지내온 우리민족에게 서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계기는 다름아닌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인한 남북민족 모두에게 부푼 꿈을 안겨준 때부터였다. 그러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이제 1주년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속에서 각종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못하고 약속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산 상선들의 영해 및 NLL침범사건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관계 개선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긴장감마저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 민족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통일을 이루려는 온 민족의 소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와같은 행위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과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마땅히 응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흠이나 가지 않을까 두려워 묵인하는 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우리의 대응태도도 언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정상회담 1년이 지난 지금 희망보다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교류협력의 길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치, 군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인도적, 경제적 교류마저 중단시킨 것 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불모로 삼으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닿는 한 인도적 견지에서 우리는 북한을 도우려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온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우리 스스로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의 타결점을 찾으려면 대미관계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외교능력과 대북 지원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북한에서 모든 면에서 끌려 다닌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제겠지만 정부도 좀더 융통성을 갖고 대범하고 유연하게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너무 조급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독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신뢰를 갖고 남북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원칙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추진하여 나가면 될 것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면 역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또한 획기적이고도 긴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요인이 현재 온 민족의 소망을 저버린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반성해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북정책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것이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아니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만이 아사지경에 이른 2천만 북한 주민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누구와도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전력으로 신뢰도는 이미 상실한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신뢰를 되찾아 남측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대외 신뢰도도 높여 가야만이 우려하는 체제 붕괴와 더불어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각급 남북회담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과 북이 합의하였던 모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과 북 모두의 국가적 손실이며 역사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 온 민족의 수치로 기록 될 것이다.

모름지기 온 민족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주었던 2000년 6월, 민족의 마음을 실어 하나로 만들었던 슬기를 다시 모아 요즘처럼 답답한 가슴을 확 터지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뿐이다.

(통일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협의회장 홍보위원장 노인병상담소장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성제한약방 ☎ 032-425-5959)